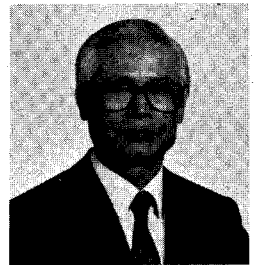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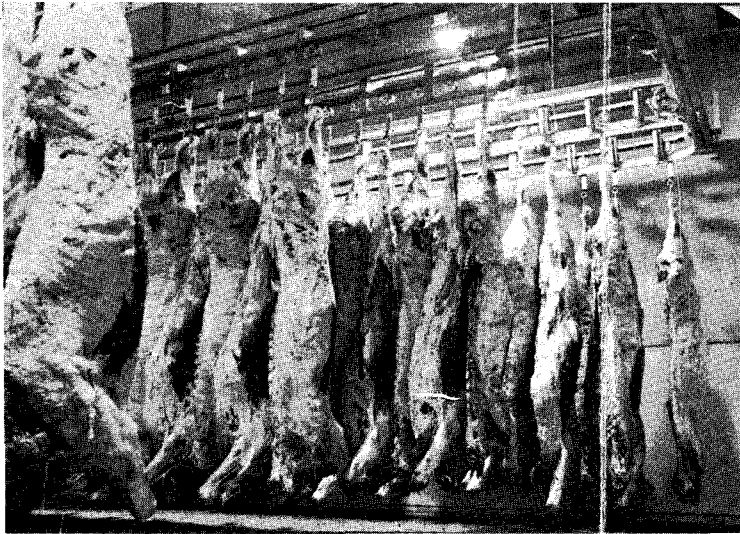


### 1. 국제환경과 축산인의 自助的 단결

84년경부터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적자 기조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의 주요 통상상대국인 미국은 우리나라 공산품에 대한 수입규제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산 상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도록 온갖 압력을 가해 오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도와줌으로써 반공전선

# 개방화시대의 축산업의 대응방안



주 총 환  
동국대학교 교수  
농업경제학

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온 미국이 이제는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공보다는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기도 한다.

미국이 그와 같은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방위비 지출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연간 약 2천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 수출의 부진과 수입의 증대로 말미암아 연간 천오백억달러 이상의 무역적

자라는 이른바 쌍동이 적자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사태가 도사리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들은 미국 자신의 정책적 잘못 때문에 발생된 것일뿐만 아니라, 특히 무역적자면에서 보면, 미국과 일본 및 EC 여러 나라와의 정책조정 실패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조정의 실패에서 오는 피해를 시장개방압력이라는 형식으로 뒤집어쓰지 않을 수 없게 된 우리로서는 매우 억울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더우기 미국을 상품시장개방면에서는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즐기치게 요구하는데, 그것을 전체 미국국민 가운데에서도 극히 적은 비중밖에 차지하는 않는 농민, 그것도 우리나라 농민에 비해 월등히 부유한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 지극히 가난한 우리나라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건국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입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우리나라 농촌에는 거의 공장다운 공장이 들어서 있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을 대부분 농의소득을 획득할 기회가 적고 소득의 압도적 부분을 농업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농의소득에 농가소득의 약 80%를 의존하고 있는 일본농가의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일본 농민들도 농산물수입개방에 직면하여 크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농가의 경우와 다름이 없겠으나 일본농가들을 그 소득의 대부분을 농업외에서 벌고 있으므로, 그 충격은 우리의 농가의 경우보다 훨씬 가벼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가의 경우에는 농산물수입증대가 즉각적으로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수입개방문제를 매우 민감한 정치문제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아래서는 농민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억압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미간의 국제적 교섭에 있어서 농민들의 목소리는 묵살될 수 있었고, 또 묵살되어 왔다. 농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쳐도 최고 집권자의 호통 한마디면 쑥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래서는, 모든 면에서 한국의 사실상의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농산물수입개방압력에 대하여, 농민이 반대때문에 못들어주겠다는 주장을 전혀 설득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6공화국 아래서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약간이나마 민주화가 진전되어, 농민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지금에 와서는 미국정부도 농산물수입개방압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최근에 미국 통상대표부의 고위관리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수입개방을 요구하고자 하는 중점분야의 하나로서 세 가지를 들고, 그 중 농산물에 대해서만은 정치적으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제6공화국 아래서 표출된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늘은 스스로 구하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축산인들은 자신들의 살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단결된 모습과 강력한 자기주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미국 국민들에게 한국농민들의 딱한 사정을 잘 주지시켜 미국의 여론이 일부의 부유한 농민들의 비인도적인 이기적 자기주장에 입각하는 로비활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쳐야 한다. 한국을 반공전선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한 위치에 놓여져 있으므로, 한국정부의 그러한 외교활동은 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 장기적 대응방안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압력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총력외교가 펼쳐져야 하겠지만, 그것과 병행하여 우리 나라 축산업 자체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력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언제까지 보호의 그늘에 安住하게 되면, 국내적으로는 소비자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압력에 밀려 수입을 일부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때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실패하여 축산업이 총체적으로 파탄에 직면할 위험마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더우기 축산업 가운데는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낮추기만 하면 수출도 가능한 품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축산업 가운데서도 양돈이나 양계등은 생산관리를 기계화·과학화 하고, 규모를 확대하고, 품질을 고급화시키면, 수출잠재력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생산성의 향상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에 걸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장기대책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생산성의 향상이 단위 생산규모의 확대에 의해 가능하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 축산업도 앞으로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기계화를 촉진함으로써 생산비를 대폭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업협동조합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규모의 확대와 생산의 기계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축산업의 분야에도 대체별이 진출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재벌들의 축산업지배는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첫째는 재벌들이 자기들의 고유영역을 제쳐놓고 옛날부터 농민들의 고유한 생계분야로 되어 왔던 축산업에까지 파고들어 독점이윤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처사이다.

둘째는 축산물마저 재벌들이 장악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축산물 가격형성에 그들의 독점력이 작용함으로써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축산물가격파동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대규모축산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절대다수 축산농가의 몰락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되어 왔다. 근자에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산성향상이라는 과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축산기업 대신에 소규모 축산인들의 협동의 힘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농민의 자조적 조직이 축산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나위도 없다. 선진 각국의 축산업은 주로 협동조합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너무나 침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축산업협동조합을 근간으로 하여 축산업의 근대화

나 규모확대를 추진할 경우, 개인자본가들의 참여를 거기에서 배제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축산업 협동조합이 출자한 주식회사에 민간투자자들을 참여시킬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축산업의 현대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대책을 축산업관련산업에 대한 축협이 참여 폭을 크게 늘리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선진국에서는 축산물가공산업은 물론 사료 등 축산물생산자재산업을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이 장악하고 있음을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서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당면한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에 대처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과거의 예를 보면, 일부의 대기업들을 농민의 이익이야 어찌되었건 이윤을 올리면 된다는 식의 사고 방식에서 외국자본과 결탁하여 농축산물의 수입을 증대시켜 재미를 보려는 기업들도 없지 않았던 것 같다. 지난 해에 어떤 재벌기업이 외국으로부터 값싼 치즈를 수입하여 가공치즈를 만들어 폭리를 취하려고 했던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축산물관련산업에 대한 축협의 참여폭은 크게 증대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이 경우에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제도를 이용하여, 축산업협동조합이 투자하는 사업에 민간자본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의 길을 터놓아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는 축산업에 필요한 각종 생산자재의 국내공급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료곡물은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급사료기반을 거의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가축의 건전한 생육과 생산성의 향상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급사료개발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높이고 장기저리융자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급사료기반을

**축산물유통구조의 개혁이 중요하다. 수입고기가 한우로 둔갑하여 팔리고 있는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일부 유제품이 식용으로 둔갑하고 있는 사태는 조속히 척결되어야 한다.**

대폭 확충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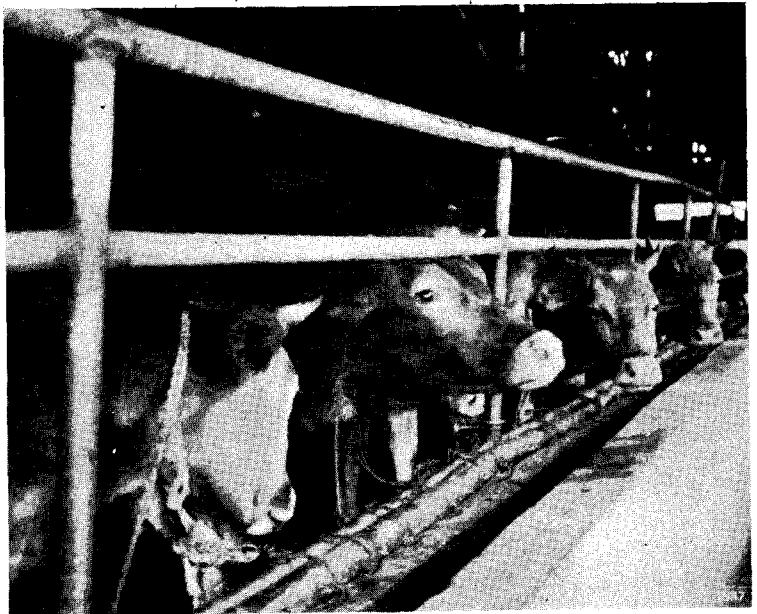
### 3. 단기적 대응방안

이상에서는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장기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만 한다.

첫째로 축산물유통구조의 개혁이 중요하다. 수입고기가 한우로 둔갑하여 팔리고 있는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일부 유제품이 식용으로 둔갑하고 있는 사태는 조속히 척결되어야 한다.

둘째로 축산물생산에는 보육기간으로 부터 성육기간에 걸쳐 상당한 기간의 생산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변동에 대하여 공급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식생활의 고도화추세에 따라 축산물가격이 다소간 변동하더라도 수요량은 그다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공급이나 수요의 탄력성이 다 같이 낮기 때문에 축산물가격은 매우 불안정한 움직임을 나타내기 일쑤이다. 특히 축산물수입으로 말미암아 공급량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을 수 없다.

**축산물가격은 자유시장에 방임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정부가 여기에 개입하여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생산자가 앞을 내다보고 안심하고 생산에 종사하도록 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최종생산물의 가격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중간생산물의 가격을 유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내축산업은 이른바 축소재산상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88년 하반기로부터 89년 상반기 현재까지 전개되어 온 소 사육두수의 추이 예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87년 부터 88년 상반기까지 나타났던 소값의 폭락을 막기 위해 가임암소의 도축을 장려한 결과, '85년도에 최고로 2,943천두에 달했던 소사육두수가 '88년말에는 2,039천두로 약 30%나 감소되었는데, 이 사육두수는 최근 소값이 상당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축의 수입증대압력을 우려한 나머지,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은 거의 없고, 더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축산물가격은 자유시장에 방임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부가 여기에 개입하여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생산자가 앞을 내다보고 안심하고 생산에 종사하도록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최종생산물의 가격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중간생산물의 가격을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번의 소값 하락에 직면하여, 암소도축을 촉진하여 공급을

감소시키느니 보다는, 송아지값을 정부가 지지해 줌으로써 육성우의 마리수를 유지하고, 이로써 향후의 소값상승에 대비했다더라면, 소값을 안정시킴과 아울러 사육두수도 적정수준에 유지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점에서 앞으로 정부는 가격을 자유시장에 방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축산업의 특수한 생산구조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가격안정정책과 가격유지정책을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정책은 개방화시대를 마지하여 더욱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축산업의 보호는 국경에서의 보호 못지 않게, 국내정책면에서는 보호조치도 중요하다는 것, 이 양자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